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주도 김영진 민주당 의원

시민 기록물 추가 등재·5·18평화대상 제정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5월 한 달을 가장 바쁘게 보내면서도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한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광주공동유치위원장과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을 동시에 맡아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5선이면서도 초선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평을 받았다. 결과는 1승1패(?). 과학벨트 광주 유치는 실패했지만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는 성공했다. 김 의원을 만나 이후 과제와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의미는

▲오월정신의 세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민주성지 빛고를 광주를 세계민주화운동의 메카로 세계인들에게 인식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이는 쾌거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인들이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할 정도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값진 문서자료라는 의미이며, 국제사회가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하고 보다 많은 세계인이 접근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1992년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등재결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피해자들만의 오월, 광주만의 오월'을 넘어 오월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알리는 신호탄



600여명이 잠입'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대 활동을 하자 대정부질문을 신청,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려졌는데 뉴라이트에서 변호사를 파견해 기록물 유산 등재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역사인식을 뒀다. 등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그 결과 김항식 국무총리로부터 "5·18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며 기록물 등재에도 정부는 많은 관심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 일 번역해 유네스코 측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심사 막바지에 14명의 심사위원 중 레바논 위원이 반대했다. '반대가 소수인데 다른 위원들이 찬성 하면 다음으로 유보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들이 유네스코 창립 정신과 벨스만델라의 정신과 맞느냐를 따져야지, 정치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느냐고 설득, 통과할 수 있었다.

-과학벨트와 관련, 단식을 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심사는 누가 봐도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불공정 심사, 짜 맞추기 심사다. 특별법에 명시된 5개 입지여건 중 광주가 가장 유리하고 포항이 가장 불리한 '재해 및 지반안정성' 항목에 형평에 어긋나게 단 1점의 배점도 없이 적합, 부적합 결정하게 했다. 또 '부지 구입 용이성' 항목과 관련, 애초 100만평이던 부지면적을 갑자기 절반인

레바논 위원 반대로 막판 위기

유네스코 정신 들어 설득 통과

이러 평가한다.

-등재 전과 후의 차이는.

▲5·18 기록물이 세계 모든 나라에 홍보·공개되고 심지어 관광가이드에도 나온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성도라는 것을 공인받은 것이다. 남아공의 경우 벨스만델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이후 관광수입이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광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에 5·18 관련 기록물 3만5000점이 등재됐지만 아직도 시민의 장롱 속에 있는 기록물이 있을 것이다. 시민이 갖고 있으면 추억이지만 공개해서 등록하면 세계적 유산이 된다. 시민들의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추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다.

이번 낭보는 5월25일 오후 3시에 날라왔다.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 유네스코 5·18 국제평화대상(가칭)을 제정해서 매년 5월25일 오후 3시에 시상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노벨평화상 등은 거부의 후원이 있었지만 이상은 시민들의 정성을 모은 기금으로 상을 만들어 광주시

민의 이름으로 시상할 것이다.

또 아시아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벨스만델라 등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한 인사들을 초청, 평화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다.

나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는 7건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기록물에 대해 상호 순회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 가톨릭센터를 리모델링한 광주 5·18 평화센터에서 전시하면 된다.

- 등재활동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다.

▲지난해 처음 기록물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자 광주의 원로들과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정부기부로 만들어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5·18 영령들에게 여쭙보면 어떻게 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비정부기구로 추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1차 요건 심사 도중 뉴라이트에서 '폭도들의 준동'이라며 반대 청원서를 낚아 국회의장·대법원장·정부문서기록보관소장·주한미대사 등의 동의를 올려서 통과됐다.

2차 본심사 도중에도 지만원씨 등이 '북한 특수부대

과학벨트 특정지역 위한 짜 맞추기

10개 연구단 예산 가져오는데 노력

50만평으로 줄었다. 대전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 임의로 묶어 61만평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경기 도중 톨을 바꾸면 되나, 반면, '연구·산업기관 집중도' 항목에 대해서는 10개 세부지표를 만들어 100점 만점에 무려 55점이 배점했다. 이런 부분을 규명하자는 뜻이다.

-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힘들지 않나.

▲정부는 과학벨트 관련 예산 5조2000억원 중 대전에 2조3000억원, 포항·대구·울산에 1조5000억원, 광주에 6000억원을 배정했다. 10개 연구단(8000억원 규모)은 배정을 유보했다. 우선 이것을 최대한 가져오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 승리해서 전면 백지화는 안 되더라도 잘못된 예산 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본원에는 2조3000억원의 예산이 가는데 본원이 포함에는 지난해 1조원 관련 예산 투자를 포함,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투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인영·송영길·안희정·이광재 등

6·10항쟁 주역들 차세대 리더 주목

이상호·오영식은 재기 몸부림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6·10 민주항쟁'이 24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학생 운동권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차세대 리더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학생 운동권의 대표주자들은 6월 항쟁 두 달 후 출범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이끈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이상호 전 의원 등이다.

이들 전대협 의장단은 16대 또는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제도권 정치인으로 활약했으나 18대 총선에서는 졸졸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인영 전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86 대표주자'로 나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특히 4·27 재보선에서 야권연대 협상을 성사시킨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통합 특위 위원장에 임명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기수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1기 전대협을 이끈 이상호 전 의원과 2기 의장인 오영식 전 의원

은 내년 총선에서 재기하기 위해 열심히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권토중래하던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 전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다.

전대협과는 구분되며 지하 학생운동을 이끌던 삼민주(민중·민중·민주) 출신으로는 조정식, 강기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 운동권 출신의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당선되면서 차차기 대권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야권의 차세대로 주목받는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 성찰적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결여 등으로 '과대포장'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기록물 총이 됐다는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 건설

녹색건축물 확대·제로에너지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 민간의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200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

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통해 녹색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허가 단계에서는 2025년까지 '제로(0)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만~25만가구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지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를 보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부금 입학, 국민 합의돼야"

김항식 총리

김항식 국무총리는 8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 입학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라북도 고창군



Top 고창 복분자 축제

2011고창복분자

Food 페스티벌

Healthy Food, 우리몸에 건강을먹다!

2011.6.10 (금) ▶ 6.12 (일)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 일원


